

보도시점 : 2025. 12. 25.(목) 11:00 이후(12. 26.(금) 조간) / 배포 : 2025. 12. 24.(수)

직·주·락 융합 지역거점 조성 종합계획 수립

-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('26~'35) 수립

【관련 국정과제】 49.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,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「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 계획」을 수립·고시했다.
 - 종합발전계획은 「도심융합특구법」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,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.
- '24년 4월에 「도심융합특구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 - ①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 조성
 - 도심융합특구는 산업·주거·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, 고품질의 교육·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·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.
 -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,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, 특화학교와 병원, 수영장·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.
 -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 기관을 집적하고, 광역철도망을 활용하여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.

② 도심융합특구의 조성·육성 방향 제시

-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목표, 추진전략,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한편,
-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하였다.

③ 도심융합특구 사업 지원 강화

-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, 연구개발특구,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하여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,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*을 집중할 계획이다.

* (중기부) 중소·벤처기업 지원, (산업부) 특화산업 육성지원, (과기부) R&D 중심 지원

- 또한,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·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.
-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세제·부담금 감면,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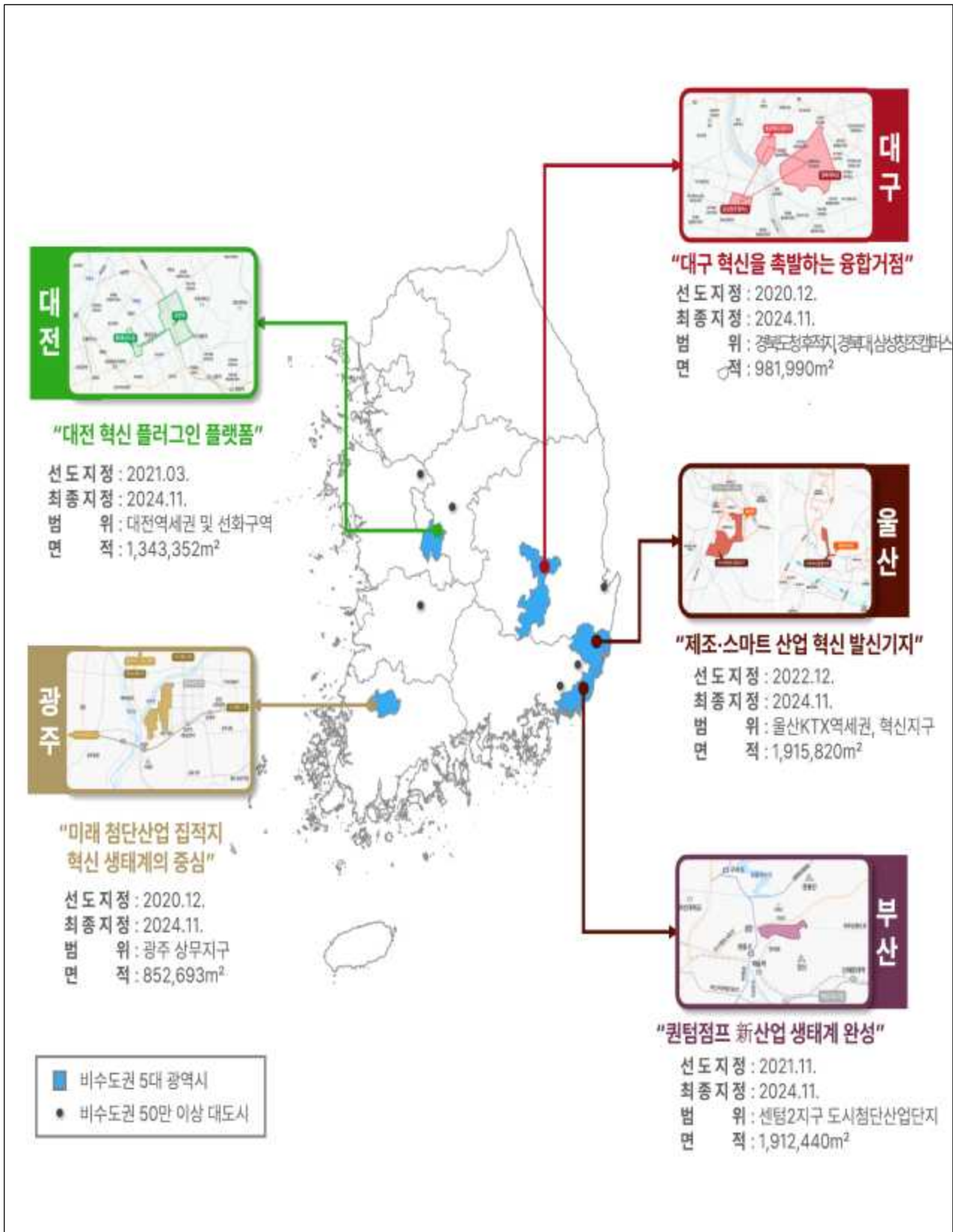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“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·주거·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,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”이며,

- “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백승호 (044-201-3684)
		담당자	사무관	박미희 (044-201-4731)
			주무관	김지원 (044-201-3649)

참고 1

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 현황



도심융합특구 비전

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, 혁신으로 도약하는 지방대도시

도심융합특구 추진 목표

매력적 공간과 네트워크 응집으로
지역인재의 성장·기회거점 조성

+

기업·기술·투자가 융합하는
균형성장파 혁신의 용광로 형성

3대 추진 전략

도심

청년·지역인재의
정주·일자리거점

• C³ 추진 전략 : 콤팩트(Compact)+
클러스터화(Cluster)+중심화(Core)

융합

메가시티의
개방형 혁신 플랫폼

• I³ 추진 전략 : 혁신(Innovate)+
연결(Interweave)+융합(Integrate)

특구

기업·기술·투자의
통합 지원 앵커

• S³ 추진 전략 : 규제혁신(Sandbox)+
패키지(Suite)+특구화(Special-zone)

5대 정책과제

과제 1 기업·인재의 유치·착근을 위한 전후방 지원생태계 형성

과제 2 청년·여성·지역인재 선호에 부합하는 장소 브랜드화

과제 3 5극3특 메가시티에 상응한 특구 최적화 및 추가 육성

과제 4 사업방식 다각화와 특구의 차별적 브랜드 제고

과제 5 정부·지자체의 기업·인재·사업 지원 실효성 제고

도심융합특구 한눈에 보기

1. 추진배경

인재·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
기존 인프라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방 5개 광역시 도시에
'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' 조성

- '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' 시행(24.4)
- 지방 5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(24.11)

2. 개념

지방 도시에 산업·주거·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,
민·관의 자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 육성



3. 주요 지원사항

기업지원



도심 융합 특구

- 도시건축규제용도지역 용적을 높이 등) 완화
- 국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
-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혁신적 기업 육성
- 특구 내 국공유 토지 활용

기획발전특구

- 국제(법인세·소득세), 지방세(취득세·재산세) 감면 등 세제 혜택



종사자 지원



도심 융합 특구

주거

-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 특별공급
- 일자리연계형 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거주 지원

교육

- 우수한 수준의 국채학교 유치
- 학교 신설 시 자율학교 지정 추진

의료

- 지역의료원 설립 등 의료시설 공급
- 의료법안제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부대사업 허용

문화

- 미술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
- 지역축제 문화거리 운영
- 전시 문화시설을 포함한 공원 녹지 조성

4. 추진절차

